

혁신도시 정부 방관... 지방공기업 멍든다

입주계약 부진... 부채 4천억원에 이자만 4백억원 탕진 세종시 몰아주기에 재정압박 가중... 정부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지 매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지방 공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 천억 원대의 돈을 금융기관 등에서 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전 기관들의 부지매입이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자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착공된 나주혁신도시 건설에는 오는 2012년까

지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 731만5천㎡에 총 사업비 1조4천181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중 33.6%인 4천253억 원을, 광주도시공사가 23.8%인 3천935억 원을 분담해 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2.6%는 한국주택도시공사(옛 토지공사)가 맡았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사업비 총 3천935억 원 가운데 1천490억 원을 은행권 차입 등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조달 금융기관은

농협이 1천억 원(연 5.4%), 광주은행 420억 원(연 5.4%) 등이며, 보상비 채권발행 70억 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의 부지매입 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혁신도시 건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동안 수익구조 없이 이자 지급액만 188억6천4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5억2천800만 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76억6천800만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무려 389억7천9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도 총 사업비 4천253억 원 중 60%가 넘는 2천60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왔다. 농협으로부터 1천억 원(이자 5.79%), 회사채 1천300억 원과 지역개발자금 200억 원을 통해 조달했다. 2년 이상 누적액만 2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균 5% 정도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 13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부족과 이전 공공기관들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두 공기업이 연 2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 공공기관들의 부지매입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전 변전소 부지만 22

억 원을 완불했을 뿐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동 주택용지 등의 일반 토지분양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안으로 인해 '혁신도시'까지 흔들릴 위기를 맞으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이자부담에 따른 지방공사 경영난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시도시공사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재신 의원(민주·광산구 2)과 조호권의 원(민주·북구 4)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박정욱기자 cki@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 위해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해결 그랜드 바겐 공감

(일괄 타결)

한미 정상회담... 보즈워스 내달 8일 방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앞으로의 공동 접근 방식에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내달 8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혀 관심

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대가로 '정치·경제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뜻도 함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FTA와 관련,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자 "(한미 FTA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체가 돼 있다"고 밝혀, 한미 FTA 비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협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자동차 협상과 관련 의견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8일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19일 공동기자회견후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미군 정병을 격려하고 이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교과부 시행안 발표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도 입하했다고 밝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상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종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연합뉴스

김장훈 사이의 완타치

2009 12. 26(토) 오후 7시 전주실내체육관

www.nctv.com